

# 내년부터 주민세·자동차세 2배로 단계적 인상

### 연말 감면 종료 예정 3조원 중 1조원 감면 혜택 폐지·축소

#### 지방세 개편 주요내용

정부가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 승용차 제외)를 2배가량 대폭 인상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안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안행정부는 20년 이상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

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지자체 복지비 부담 가중 등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정부가 서민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당국도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민세·자동차세 대폭 인상=정부는 우선 주민세를 2년에 걸쳐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개인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 4500원, 전남은 평균 5000원 정도 수준이다. 목포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어 내년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으로, 2016년에는 1만원으로 정했다. 단체장이 주민 ‘눈치’를 보면 인상에 머뭇거릴 가능성이 높아 하한선까지만 올릴 것이다.

법인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

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 자본금 100억원 이하 구간(4단계)은 현재 5만~35만원에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만5000~52만5000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만~7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부과한다.

1991년 이후 동결된 자동차세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105%)을 반영해 2017년까지 2배 인상할 방침이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톤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운수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해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오른다.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선납으로 인한 이자보전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도 폐지한다. 한편 100%인 공제율을 내년에도 5%로 낮추고 2016년에는 아예 없앤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폐지·지방세 감면을 축소=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5% 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국제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감면에 대한 재설계를 마련했다. 한편 안행정부는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의무 실시, 대규모 국제경기나 축제, 행사 등의 유치 신청 등의 경우 사전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 지방세 개편방향 주요 내용

- 장기 미조정 정액세 현실화  
지방재정 확충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 대폭 인상
-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원칙에 어긋나거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부 지방세목의 과세체계 개선
-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정  
지방세 감면율을 국제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한 재설계안 마련
-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권익 및 편의 제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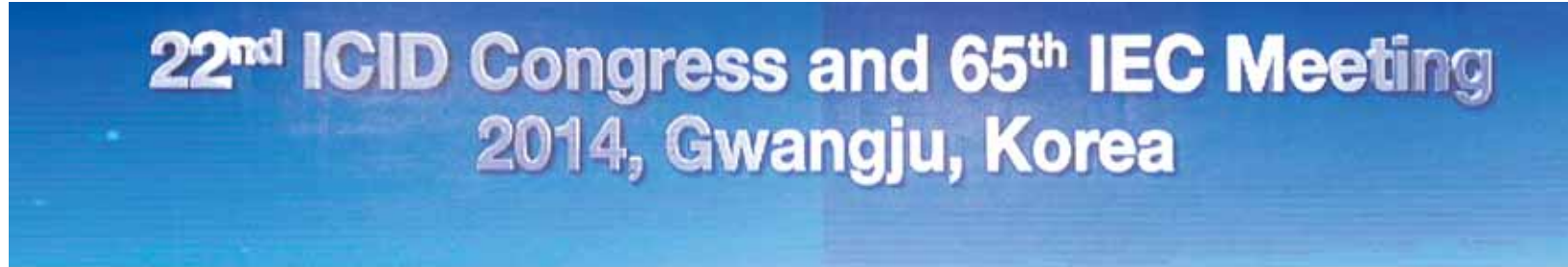
#### 주민세

구분	현행	2015년	2016년
개인	1만원 이하 범위 (조례로 정함)	1~2만원 범위 (조례로 정함)	1~2만원 범위 (조례로 정함)
법인사업자	5만원	7만5천원	10만원
재산분	250원/㎡	350원/㎡	500원/㎡

#### 법인근로자

자본금	100억 이하	10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그 밖의 법인	5	10	10	10	10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	10	10	20	10	20
30억~50억	10	20	20	40	20	40
50억~100억	20	35	40	70	40	70
100억~500억	20	50	70	105	70	105
500억~1000억			105	157	105	157
1000억~1조			157	235	157	235
1조~10조					235	352
10조 초과					352	528

#### 자동차세



ICID 광주총회 개막 2014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광주총회가 14일 62개국 1200여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와 2014 ICID광주총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하는 ICID 광주총회는 오는 20일까지 '기후변화와 농촌융복합'을 주제로 기후변화시대에 맞는 관개배수와 식량, 농업,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증세 없는 복지’ 외치던 정부 “복지 재원 위해 불가피”

#### 지자체 “복지 디폴트” 경고에

#### 장기간 동결된 지방세 현실화

안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점차 폐지해 복지비 부담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지방세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복지·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계속 확대된 복지 수요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2008년 이후 도입된 구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2008년), 양육수당(2009년), 장애연금(2010년), 기초생활보장제도(2010년), 영유아보육료(2011년) 등 굵직한 복지제도로 인해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가 올해 기준으로 6조39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는 늘어난 복지비 부담을 놓고 신경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전국의 시군구청장들은 정부가 복지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중단)’를 조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온 정부는 결국 지방세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5

차례 세미나와 6차례 순회토론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세 대거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약속에 배치되는 데다 인상 폭이 워낙 커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치단체 내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 인상방안도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간접세 인상으로 손쉽게 타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는 “복지와 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 인상이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정부 지방세 개편안 與野 대립각...국회 진통 예상

#### 새누리 ‘인상폭 논의 필요’ 신중론

#### 새정치 ‘서민에 부담 전가’ 불가론

여야는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지방세 인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인상폭 자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대기업 세금은 탕감해주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반대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면 법 개정을 둘러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지방재정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10~20년간 묶여온 세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그 폭이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 차원

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개편 방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서민 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재원의 지방 전가로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반발하자 쪼여짜 낸 생각이 바로 ‘서민증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서민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박 대통령이 약속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 세원 발굴을 보여달라”면서 “이 같은 선행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증세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 우회증세로 매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꼼수가 거듭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법 모두 틀릴 뿐더러 ‘비정상’을 고착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움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